

변용능력의 관점에서 본 노년* : 부산의 노령화 문제에 대한 인문학적 고찰

박원용** · 조정민*** · 김은주**** · 정범모*****

1. 문명의 상징체계에서 노년의 자리
2. 정신과 신체의 변용능력과 노년에 대한 정의
3. 역사적 사례를 통해 본 노년의 가치
4. 일본 사회의 '노년'에 대한 새로운 정의와 시도
5. 증가하는 노령층의 참여 확대를 위한 부산시의 정책
6. '변용능력'을 내포하는 시기로서 노년에 대한 인식전환

<국문초록>

노년인구의 비율 증가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이다. 이로 인해 파생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정책에는 그들의 수동성, 의존성을 전제하고 있다. 즉 노년층은 주체적으로 삶을 유지할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복지정책, 돌봄 위주의 정책 등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노년과 관련한 인문학 분야의 공동연구를 촉발하는 차원에서 모인 본 연구자들은 노년층에 대한 이러한 시각에 대한 재고를 요청하는 차원에서 스피노자의 '변용능력'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변용능력의 개념을 노년의 시기에 적용해보면 그것은 노년기 이전의 존재 양식에 내포되어 있는 활동과 교류의 방식을 유지하면서 그것을 또한 창조적 형태

* 이 논문은 2019학년도 부경대학교 국립대학육성사업 지원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부경대학교 사학과 교수 (wypark@pknu.ac.kr)
 *** 부경대학교 일어일문학부 부교수(regina@pknu.ac.kr)
 **** 부경대학교 교양교육원 조교수(kimej@pknu.ac.kr)
 *****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조교수(itwins@pknu.ac.kr)

로 발전시킬 수 있는 사유의 가능성을 제공해 준다. 그러한 사유의 방식을 구현한 사례를 우리는 사회주의 체제 하의 러시아, 일본, 부산의 노년 정책에서 찾아보았다.

소비에트 러시아에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는 노년층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동시에 노년층이 기여했던 이전의 경험을 사회주의 체제의 신세대에게 전수함으로써 과거와 현재를 연결할 뿐만 아니라 발전적 미래를 위해 노년층의 역할을 중시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었다. ‘변용능력’을 중심으로 노년기를 본다면 수동성과 의존성이 강한 시기로 규정하는 일반적 방식에서 벗어나 이전의 경험과 지식을 새로운 맥락에서 활용하고 전수하는 시기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변용능력의 새로운 활성화 사례를 우리는 일본의 최근 노년 정책에서도 발견하였다. 즉 지금까지 노년층에 대한 정책의 주된 방향이었던 ‘돌봄의 사회화’를 최소화하고 노년층에게 알맞은 사회 참여의 다양한 형태를 개발하여 그들의 주체성, 자발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방향은 노년층을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하는 기생집단으로 바라보면서 노동 참여세대와의 갈등을 유발하는 부정적 시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 준다. 노년층에 대한 지역별 맞춤형 전략을 모색하는 부산시의 최근 정책방향, 노년층과 청년층의 세대 단절 대신 상호에게 도움을 주는 정책의 수립 같은 사례들은 과거에 획득한 변용능력이 적절한 맥락에 새롭게 위치지워짐으로써 다시 활성화되고, 그 결과 노년이 오히려 변화에 대한 창조적 대응의 원천이 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 주요어: 변용능력, 노년인구, 인문학적 성찰, 돌봄의 사회화, 부산

1. 문명의 상징체계에서 노년의 자리

인간만이 ‘늙는다.’ 쇠퇴기 없이 번식을 끝내자마자 죽는 동물도 있다. 반면 인간에게는 쇠퇴기가 있다. 그리고 문명이 발달할수록 삶은 길어지고

그만큼 쇠퇴기 역시 길어진다. 그러나 인간 문화의 낱실이 되는 상징체계 안에 노년의 자리는 아직 없는 것 같다.¹⁾ 삶과 죽음, 건강과 병, 아이와 어른 등의 이항대립에서 노년은 후자의 항과 유사해 보이지만, 그것들과 동일시되지도 않는다. 가령, '죽음'은 고대 스토아, 에피쿠로스 학파부터 20세기 하이데거에 이르기까지 즐기치게 반복되는 철학적 주제이다. 아무도 자기 자신의 죽음은 경험할 수 없지만 죽음은 삶에 의미를 부여한다. 그것은 삶을 영웅적인 것으로 혹은 운명적인 것으로 만든다. 반면 '노년'은 삶에서 항상 목격할 수 있고 스스로 경험할 수도 있지만, 삶과 동일시되지도, 그렇다고 죽음과 동일시되지도 않으며, 삶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도 않는다. 노년은 단지 죽음을 향해가는 과정일 뿐이다. 문명의 관심은 삶(혹은 성장으로서의 삶)과 죽음, 이 둘이지 퇴화에 있지 않다. 퇴화는 문명 바깥에 있는 그저 '자연적'인 현상일 뿐이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나 노인은 있었지만, 이처럼 문명의 상징체계 안에 노년의 자리가 없는 이유는 한편으로 오늘날처럼 긴 쇠퇴기를 살 수 있었던 노인이 드물었기 때문일 것이다. 죽음은 모두에게 보편적이지만 노년이 것처럼 보편적이지는 않았다. 다른 한편 삶의 조건이 척박했던 시대에, 퇴락하고 쓸모없어진 노인을 돌볼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드물게

1) 특히 노년에 대한 심층적인 철학적 접근은 해외에서도 드물고, 국내에서는 거의 전무해 보인다. 가령 '철학'이라는 표제를 단 드문 논문 중 하나인 「한국사회 노인문제에 대한 철학적 고찰」(정환수, 『철학논총』 71(1), 새한철학회, 2013, 335-336쪽 참조)을 보면, 여기서도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의 유희 노동력 활용의 필요성을 다룰 뿐이며, 철학적 의미는 단지 인간 삶에서 '노동'의 중요성에서 찾을 뿐이다. 노년에 대한 거의 유일한 철학 저서로는 시몬 드 보부아르의 저서 『노년』(Simone de Beauvoir, *La vieillesse*, 홍상화, 박혜영 옮김, 책세상, 2002)이 있다. 이 저서에서는 물론 '타자'로서의 노년을 다루고 있지만 이 철학적 고찰에 할애된 부분은 매우 적다. 오히려 이 저서는 철학서라기보다는 인류학적, 사회학적 사례들이나 유명한 학자나 예술가들의 개인들의 노년에 대한 사례를 모은, 풍부한 보고서의 성격이 더 강하다. 그 외 노년에 대한 해외의 철학적 연구가 시작된 것도 비교적 최근이며, 시간이나 죽음, 의존성과 신체장애(disabilities), 성, 불평등의 문제가 주로 다뤄진다. 그러나 이 역시 현재까지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매우 제한적이다. 이 문제들을 다룬 철학 논문집으로 Geoffrey Scarre (ed.), *The Palgrave Handbook of the Philosophy of Aging*, 2016, London: Macmillan Publishers; Martha C. Nussbaum & Saul Levmore, *Aging Thoughtfully Conversations about Retirement, Romance, Wrinkles, and Regre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7을 참조할 수 있다.

장수하는 노인에 대해 사람들은 신비의 눈으로 바라보고 외경심을 품거나, 아니면 그저 사물처럼 학대하거나,²⁾ 둘 중의 하나였던 것 같다.

반대로 오늘날 노년이 주목받는 이유는 노년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 때문일 것이다. 사회복지학이나 심리학에서 노년 연구의 비중이 증가하고 ‘노년학’(gerontology)이 생겨난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조금 더 먼 시각에서 보면, 한편으로는 긴 쇠퇴기가 대부분의 인간에게 거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보편적 운명으로 다가왔고, 다른 한편 노년을 어쨌든 진지하게 고려할 만큼 물질적, 정신적 여유가 생겼기 때문일 것이다. 노년에 대한 사회학적이거나 심리학적 혹은 복지론적 관점의 접근과는 다른 인문학적 접근이 필요한 것은 이런 긴 호흡의 전망을 모색하기 위해서이다. 이 논문은 이를 위한 시론이다.

사실 부산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 중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노년에 대한 논의는 사회 보호의 대상자, 보건 위생의 대상자, 문화 복지의 대상자로서의 노인 문제로 한정되는 경향을 띠어 왔다. 이런 경향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응의 시급성에 기인할 것이다. 그러나 뒤에서 구체적으로 논하겠지만, 노년에 대한 규정 자체가 대단히 애매하고 자의적이라는 점을 염두에 둘 때, 노년 문제는 사회학적 행정학적 대책 마련 이전에 역사학, 철학, 인류학, 문화학 등 다양한 인문학적 관점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고령화 및 노년의 문제를 사회적, 제도적 문제로 접근해 왔던 기존의 연구를 인문학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나아가 다른 어느 도시보다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부산의 고령화 문제를 이런 틀에서 바라보고자 한다. 아래에서는 우선 철학적 관점에서 ‘노년’을 정의하고(2절), 우리 사회와 상이한 체제의 경험으로 사회주의에서 노년의 지위(3절), 그

2) 보부아르가 수집한 민족지 연구의 다양한 사례들에 따르면, 시베리아의 야쿠트인이나 일본 문명의 영향을 받기 이전의 아이누인, 볼리비아 숲의 시리오노족 등, 물질적으로 척박한 환경에 살았던 부족들은 늙은 사면이나 지혜가 많은 노인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노인을 버리거나 오늘날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학대하곤 했다. 시몬 드 보부아르, *op.cit.*, 57-80 쪽을 참조하라.

리고 우리 사회와 유사한 체제의 경험으로 일본 사회에서 노년의 지위(4절)를 고찰한 후,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에서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부산의 구체적 정책을 중심으로 변용능력의 개념이 구체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고찰해볼 것이다(5절). 단, 지면의 한계상 각 세부 주제를 충분히 전개하기는 어려우며, 다면적인 인문학적 접근의 한 단초를 마련하는 것이 이 글의 목표임을 미리 밝혀둔다.

2. 정신과 신체의 변용능력과 노년에 대한 정의

이런 전망 하에서 우선적으로 고찰할 것은 노년에 대한 정의이다. 누구나 노인이 되어 가지만 누구든 자신이 노인임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 여성에 대해 기념비적 저서를 쓴 시몬 드 보부아르는 나이 62세 들어 노인에 대한 책, 『노년』³⁾을 썼다. 여성과 노인은 둘 다 사회에서 소수자이다. 그러나 주체화 양식은 상반된다. 우선 여성과 달리 노년은 보편적이다. 누구나 여성일 수는 없지만 살아있는 한 누구나 노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노년은 또한 보편화될 수 없다. 여성과 달리 누구도 일률적으로 노인이 되지는 않는다. 나아가 노인은 자신의 노인됨을 부인할 수도 있다. 노인됨은 심지어 타자에 의해 부과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조차 사람들은 그것을 끝끝내 받아들이지 않거나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⁴⁾ 이런 자기 부정은 노인이 처한 다양한 사회적 조건이나 이에 따른 노년에 대한 시각 방식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노년’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생각보다 다양함을 보여준다.

노년은 일차적으로 연대기적(chronological) 정의이다. 특정 나이에 일

3) Ibid.

4) 한 인터뷰에서 시몬 드 보부아르는 이 점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사르트르는 ‘실감되지 않는 것’이라고 명명하여 노년을 아주 잘 정의했어요. 그것은 타인에게 존재하는 것이지만, 결국 당신 자신에게는 그만큼 존재하지 않습니다. 잠에서 깨고, 걷고, 책을 읽을 때 나는 결코 내 나이를 생각하지 않으니깐요.”(김정란, 「보부아르의 『조심스러운 나이』에 나타난 노년의 문제」, 『프랑스어문교육』 44, 한국프랑스어문교육학회, 2018, 292쪽에서 재인용).

률적으로 노인이 되지는 않지만, 설령 병들어 신체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20-30대의 사람을 노인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둘째, 노년은 사회적 정의이기도 하다. 오늘날 ‘노인’은 특히 빈곤 계층의, 의지할 데 없이 고독한 사람을 가리킨다. 유복한 사회적 조건에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노인으로 여기지도 않거니와 생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노화를 늦출 가능성이 훨씬 많다. 노년은 또한 문화적 정의이기도 하다. 말년의 칸트나 미켈란젤로, 고야가 그랬듯이, 지적 작업이나 예술적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나이 들어 더 완숙한 작품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그들 스스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역시 이 시기 그들의 정체성을 ‘노인’으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이 셋 모두가 노년에 대한 정의와 관련되지만, 중심축이 되어야 할 것은 마지막 문화적 정의로 보인다. 위대한 철학자나 예술가 외에 좀 더 평범한 사람들의 경우를 보자. 큰 병에 걸린 경우를 제외하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급격한 노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은 하던 일을 멈추게 되었을 때이다. 일은 단지 정신적, 신체적 활동만이 아니라 사회적 연관과 미래를 향한 기투의 매개이기도 하다. 생물학적 연령이나 심지어 신체 기능과 독립적으로, 학자나 예술가가 늙지 않는다면, 그리고 농부가 도시 노동자보다는 덜 늙는다면, 그들은 이런 매개를 유지하기 때문일 것이다.

노년을 이런 문화적 관점에서 정의하기 위해 철학적으로 참조할만한 개념은 스피노자의 ‘변용능력’이다. 스피노자는 각 개체의 ‘본질’을 ‘역량’(potentia)으로 정의한다. 이는 아리스토텔레스처럼 목적론적으로 정의된 잠재성으로서의 역량(dynamis)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자기 존재를 유지하려는”(perseverare in suo esse) 노력(conatus)⁵⁾을 가리킨다. 더 구체적으로는 다른 것에 영향을 미치고 또 영향을 받아들이는 능력, 곧 변용(affectio)의 능력을 가리킨다. 이것은 신체의 측면에서는 다른

5) Baruch Spinoza, *L'Éthique*. Bilingue latin-français. ed. & trad. par Bernard Pautrat. Paris: Seuil, 1998. Part III, Proposition 6 (*아래 인용은 이 책으로부터 인용자에 의해 한글로 번역된 것이며, 출처 역시 한글로 번역하여 표기함. 가령 위의 인용의 경우, “스피노자, 『윤리학』 3부, 정리 6”과 같이 표기).

것들로부터 동시에 여러 방식으로 변화되거나 감응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킨다. 이와 평행적으로 정신의 측면에서는 한 가지 생각이나 한 대상에 고착되지 않고 여러 가지를 동시에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⁶⁾ 그리고 이렇게 해서 형성된 각 개체의 특정한 변용 방식을 스피노자는 각 개체의 ‘기질’(ingenium)이라 불렀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노역을 하거나 짐을 끄는 말과 경주마 사이에는, 노역을 하는 소와 말 사이보다 더 큰 차이가 존재한다.”⁷⁾ 스피노자는 존재자들 간의 이와 같은 유사성은 물론이고, 그들 간의 위계, 그러니까 인간이 다른 존재자들에 비해, 그리고 특정 인간이 다른 인간에 비해 갖는 우월성을 생물학적 유와 종이 아니라 변용능력으로 정의한다. 변용능력이 클수록 자기 존재를 유지할 가능성, 더 구체적으로는 자기 삶을 자기 방식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노년은 변용능력의 상대적 축소로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노인은 양육자의 손길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아기보다는 분명 변용능력이 훨씬 크다. 그러나 삶의 절정기에 비해서는 변용능력이 줄어든다는 것도 확실하다. 노년을 지배하는 것은 과거의 습관이다. 습관이 주는 규칙성은 삶의 안정성을 준다. 어쩌면 그것은 삶의 권태나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는 방법일 지도 모른다. 반대로 노년기에 가장 어려워지는 것이 변화에 적응하는 일이다. 성공적인 삶을 살았든 아니든 이미 수립된 안정된 삶의 규칙 속으로 이질적인 요소를 통합해내는 일은 어려워진다. 인간이 대개 그렇지만, 특히 노년의 인간은 많은 것을 과거 삶의 습관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이 기준에 따라 살기를 고집하며, 나아가 타인 역시 자신의 이런 기질에 따라 살아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보면 나이가 아주 많아도 노인이 아닌 노년도 있고, 나이가 적어

6) “한 신체가 다른 신체들에 비해 [여러 가지에] 동시에 작용하고 작용 받는 데 더 알맞을수록, 그 정신은 더 많은 것을 동시에 지각하는 데 알맞다. 그리고 한 신체의 작용이 오직 그 자신에만 더 의존할수록, 그리고 작용하는 데 다른 신체들이 덜 공조할수록, 그의 정신은 판명한 방식으로 이해하는 데 더 알맞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우리는 한 정신의 다른 정신에 대한 우월성을 인식할 수 있다.” (스피노자, 『윤리학』, 2부, 정리 13의 주석)

7) Gilles Deleuze, *Spinoza. Philosophie pratique*, 박기순 옮김, 『스피노자의 철학』, 민음사, 1999, 184쪽.

도 이미 노인인 젊은이도 있을 수 있다. 차이가 있다면 다만 젊은이는 변용 능력의 확대를 내다볼 수 있는 반면, 노인은 그런 전망이 더 닫혀 있다는 점일 것이다. 이는 그들이 살아온 삶의 습관의 무게로 해명할 수 있다. 늙은이는 과거의 습관에 기대어 행위 방식을 결정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행위를 판단하는 비중이 젊은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크다. 반대로 나이드는 예술가를 노인으로 규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그들이 과거 삶의 습관에 매몰되지 않고 계속 창조를 위한 도전을 감행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변용능력의 확대가 과거의 습관을 무조건 부정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개체의 동일성이 변용이 일어나는 특정한 방식으로 정의된다면, 변용 방식의 급격한 변화⁸⁾는 생물학적 죽음과는 별개로 개체의 죽음을 가져온다. 죽음까지는 아니라도 어쨌든 급격한 변화의 강제는 변용능력의 축소를 가속화할 수 있다. 공포나 불안 속에서는 많은 것에 동시에 작용할 수 없고 많은 것을 동시에 사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변용능력의 확대는 오히려 지금까지 수립된 개체 내외적 관계의 유지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확보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 말년에도 훌륭한 작품을 생산하는 예술가는 생애 전 과정에 걸쳐 획득한 변용을 새로운 관계나 맥락에 편입시켜 새로운 방식으로 활성화할 수 있었던 자들이기도 하다.

더구나 개체의 존재 가치가 전부 변용 방식에 의한 위계로 판단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앞서 말한 변용능력에 따른 위계에 따르면 물론 인간은 진드기보다 우월하다. 들뢰즈가 워크킬(J. von Üxküll)의 동물행동학에서 가져온 진드기의 사례를 보자. 진드기에게는 세 개의 변용만이 있다. 첫 번째는 시각적 변용(나뭇가지의 위쪽으로 기어오른다), 두 번째는 후각적 변용(그 가지 밑으로 지나가는 포유동물 위로 떨어진다), 세 번째는 열과 관련된 변용(털이 없고 보다 따뜻한 곳을 찾는다)이다.⁹⁾ 이에 비해 인간은 수없이 많은 변용을 할 수 있고 이 점에서 인간은 진드기보다 훨씬 더 우월하

8) 이는 스피노자에게서 각 개체를 정의하는 “운동과 정지의 비율”의 해체로 볼 수 있으며, 후자의 예로 스피노자는 모국어 외에 모든 기억을 상실한 에스파냐 시인의 사례를 든다(『윤리학』, 4부, 정리 39의 주석).

9) Gilles Deleuze, *op. cit.*, 185쪽.

다. 그러나 스피노자에 따를 때, 모든 존재자는 다른 존재자와의 비교 없이 그 자체로 고려할 때 그만의 지복(*beatitudo*)을 누린다.¹⁰⁾ 진드기가 누릴 지복이 인간이 누리는 지복보다 덜하다고 할 수 없다.

이처럼 노년기 변용능력의 유지-확대를 위해서나, 노년의 행복을 위해서나, 각 개인이나 사회는 각자가 유지해 온 삶의 양식을 대체로 유지하고 반복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도 그것을 가변적인 사회적·문화적 연관망으로 새로이 통합하여 계속 살아있는 의미를 획득할 수 있도록 노년의 삶을 준비하고 조직해야 할 것이다. ‘변용’이라는 철학적 관점에서 노년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구체적 사례를 러시아의 역사에서 발견할 수 있다.

3. 역사적 사례를 통해 본 노년의 가치

21세기 초입부터 러시아 정부가 직면한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는 1999년 67세였던 기대수명이 2002년에는 64세로 떨어져 러시아의 전체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었다. 인구의 총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러시아 정부가 우려할 만한 또 하나의 현상이 동시적으로 등장했는데 노년 인구의 증가가 바로 그것이었다. 기대수명은 하락하는 데 노년인구 비율이 늘어나는 러시아의 현상은 바로 출산율의 하락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었다. 1987년 여성 일인당 출산율이 2.194명 이었다면 2000년의 그것은 1.214명으로 떨어졌다. 그리하여 16세 이하의 인구비율은 1989년 24.5%에서 2002년 18.6%로 떨어진 반면 연금생활자의 비중은 18.5%에서 20.7%로 상승했다. 은퇴직전에 있는 50세부터 59세까지의 인구 구성 비율이 적지 않다는 것을 고려하면 21세기에 들어와 러시아 인구의 고령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¹¹⁾

10) 이는 신은 곧 자연이며, 자연 안의 모든 존재자가 신의 역량의 특정한 표현이라는 스피노자의 형이상학의 귀결이다.

11) Timothy Heleniak, "Geographic Aspects of Population Aging in the Russian Federation," *Eurasian Geography and Economics* 44: 5, 2002, pp. 325-326.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는 노년 인구 비율의 증가라는 전 세계의 공통적 사회문제에 대해 색다른 접근의 기회를 제공한다. 소비에트 러시아에서 연금생활자로 대표되는 노년인구는 체제가 지향하는 평등의 이데올로기 때문에 체제의 적극적인 고려대상이었다. 1936년 소비에트 헌법 129조와 1977년 헌법 43조는 노년의 소비에트 시민에 대한 국가의 연금지급을 분명하게 규정했다.¹²⁾ 그렇지만 이러한 명목상의 규정에서 소비에트 체제의 다수 시민을 구성하는 농민들 모두가 연금생활자로서의 권리를 누리지 못했다. 1956년의 국가연금법은 임금노동자와 봉전생활자, 농민들을 연금의 수혜자로 명시했지만 집단농장의 농민들을 제외한 국영농장의 농민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흐루쇼프는 소비에트 러시아를 “전체 인민의 국가”라고 선언하면서 인민을 구성하는 핵심계층인 공장노동자와 농민의 차별을 없애려고 했지만 연금을 통한 평등한 사회주의 체제의 건설을 확립시키지는 못했다. 즉 1975년부터 전체 국민의 17.1%를 차지하는 집단농장의 농민들에게도 국가의 연금이 지급되었지만 노동자와 이들 농민들이 수령하는 연금액의 차이는 여전히 그러한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명목상의 선언도 등장했다.¹³⁾

사회주의 체제 인민에 대한 차별 없는 연금지급이 실현되지 못했던 것은 체제의 생산력 증진을 소비에트 체제의 출범부터 최우선적 과제로 설정했던 역사적 경험과 무관하지 않다. 내전을 종식시키고 신경제정책과 같은 제한적 시장경제를 불세비키 정부가 용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에트 체제의 생산력은 자본주의 체제의 그것에 한참 뒤처져 있었다. 산업생산력을 증진시켜 소비에트 체제의 산업화를 신속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생산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노동자들의 경쟁을 용인하고 국가의 생산 목표량을

12) Neil J. Mitchell, “Ideology or the Iron Laws of Industrialism: The Case of Pension Policy in Britain and the Soviet Union,” *Comparative Politics*, 15: 2, 1983, p. 183.

13) P. Simush, “Social Changes in the Countryside,” *Soviet Review* 19 Summer, 1978, p. 44; V. A. Acharkan, “State Pensions in the USSR,”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Review* 29:3, 1976, p. 261.

초과 달성한 스타하노프 운동가들에게는 생산의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차별적 혜택도 필요했다. 스탈린 체제가 출범하면서 혁명의 이념적 기반이었던 전 인민의 평등보다는 성과급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비율이 1930년 무렵의 29%에서 1932년에는 68%에 증가할 정도로 체제의 기여도에 따른 차별정책은 더욱 두드러졌다.¹⁴⁾

생산성을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에서 인생의 말년에 해당하는 노년기는 긍정적 가치보다는 부정적 가치를 더 많이 내포하는 시기로 받아들여졌다. 더구나 노인들은 사회주의 체제가 일소하려는 구체제적 삶의 태도, 즉 종교적 의식을 준수하거나 미신을 믿으면서 체제가 지향하는 ‘소비에트형 인간’으로의 전환을 완강히 거부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렇지만 노동계급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체제의 이데올로기적 특성상 노년의 시기에 도달한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보장 정책을 경시할 수는 없었다.¹⁵⁾ 문제는 더 이상 노동자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노령의 노동자들 모두에게 연금을 지급할 만한 재정여건이 확립되지 못한 데 있었다. 이념적 차원의 배려를 하더라도 현실적 상황을 고려한 타협책이 필요했다.

1920년대 전반기의 규정에 따르면 더 이상의 노동능력이 없는 노동자들이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생산현장에서 8년간 일했다는 증명 서류가 필요했다. 1925년을 기준 연도로 상정하더라도 8년의 노동경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1917년부터 이미 노동계급에 편입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혁명정부에 반대하는 백군과의 내전이 1921년에 종식되었기 때문에 이때를 틈타 공장 노동계급에 ‘기회주의적’으로 편입하려고 하는 노동자들을 배제한다는 의미였다.¹⁶⁾ 볼셰비키 정부의 이념에 충실한 노동자들만이 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였으며 선별적 복지를 통해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려는 의도 또한 내포하는 것이었다. 또 다른 의미에서 이러한 조치는 노

14) T. Cliff, *State Capitalism in Russia*, Surrey, 1974, p. 19.

15) Bernice Q Madison, *Social Welfare in the Soviet Union*,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1968, 4장.

16) Stephen Lovell, “Soviet Socialism and the Construction of Old Age,” *Jahrbücher für Geschichte Osteuropas* 51: 4, 2003, p. 573.

동현장에서의 작업 중 부상 혹은 질병을 얻어 작업능력을 상실한 노동자들이 연금 수령을 위해 노동자 경력기간을 증명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과 비교할 때 노령의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이었다. 40년 이상 공장에서 일했던 노동자가 1924년에 발간된 잡지에 보낸 기고문에 따르면 자신은 연금 수령을 위해 필요한 서류 작성에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공장에 들어온 지 1년 밖에 안 되는 젊은 노동자는 작업장에서 입은 부상으로 연금을 아무런 서류 준비 없이 수령할 수 있는 상황이 불공정하다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었다.¹⁷⁾ 소비에트 러시아는 체제의 발전에 한때 기여했던 노령의 노동자에 대한 기간적 연금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모든 인민의 복지에서 멀어졌다는 비판이었다.

소비에트 러시아의 1920년대 중반 이후 등장한 노년기에 접어든 노동자들에 대한 선별적 연금 지급은 당장의 생산성 확대에 기여할 수 없다는 단기적 판단에 근거한 것이었다. 그러나 노년기에 들어선 소비에트의 노동계급을 물질적 기여도만을 가지고 평가하지 말자는 주장이 1920년대 후반부터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소비에트 체제의 출범 훨씬 전부터 노동자로서의 삶을 시작하여 생산현장에서 다양한 기술을 익혀왔다. 차르 체제 아래서 그들은 또한 불법적 혁명운동에 참여하면서 노동자들의 연대의식의 증진에 기여했다. 그들은 혁명정부가 출범한 이후 자신들의 이러한 경험을 젊은 세대에게 전승하면서 현재의 소비에트 체제가 구체제에 비해 얼마나 진전되었는가를 증언하고 있다. 소비에트 시민으로서 새로운 삶의 기회가 부여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노년의 시기에 접어들었지만 삶에 대한 보다 적극적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즉 노년기를 무기력하고 사회에 기여할 바 없는 무의미한 시기로 바라보는 것은 자본주의 체제의 병리학적인 관점에 불과하다. 스탈린이 1935년 11월, 스타하노프 운동가 협의회에서 “동지들, 삶은 더 좋아졌고 더 즐거워졌다”¹⁸⁾라고 천명했듯이 노년기의 인민은

17) Ibid, p. 572.

18) И. В. Сталин, “Речь на первом всесоюзном совещании стаховцев,” in Robert McNeal ed., *Сталин: Сочинения 14*, Stanford, Calif.: Hoover Institution, 1967, p. 85.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삶의 즐거움을 소비에트 체제의 달라진 환경 안에서 더 적극적으로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따라서 노년기 인민의 모습은 젊은 세대들에게 소비에트 가치를 전승하는 전달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바로 그러한 역할 수행이 이전의 생산현장에서 부여된 역할과는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그들의 가치인 것이다.¹⁹⁾

소비에트 러시아에서는 생산력 증진이라는 긴박한 과제 때문에 노년층에 대한 선별적 연금지급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시되기도 했다. 노년층에 대한 전면적 복지가 아니라 체제의 이념에 충실한 정도와 체제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기간에 따라 사회주의 체제의 복지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다른 한편에서는 사회주의 체제 이전의 노년층의 경험은 현 체제의 발전정도를 증명하는 소재로 활용하면서 그들의 미래 또한 자본주의 체제의 노년층과는 달리 더 나은 삶을 기대하며 활기찬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가능성이 충분한 시기로 바라보자는 주장이 있었다. “미래의 연금생활자는 현재의 노동자이다”²⁰⁾라는 『프라브다』의 신문사설은 현재의 삶이 미래의 삶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는 희망의 표현이었다. 이러한 인식은 에릭 에릭슨이 『인생의 아홉단계』에서 지적했듯이 노년기의 정체성을 “과거, 현재, 미래가 통합된 실존적 정체성”²¹⁾으로 보려는 시도가 소비에트 러시아에서도 있었던 것이다. 노년기를 인생의 단계에서 이전의 삶의 방식과 분리되는 시기로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시기로서 바라보려는 시도가 사회주의 체제 러시아에서 있었다. 노년층의 인구가 갈수록 증가하는 현 시점에서 이러한 시각은 노년층에 대한 우려가 아닌 그들의 경험과 지식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해 준다.

19) Stephen Lovell, "Soviet Socialism," pp. 577-599.

20) *Правда*, October 15, 1934.

21) 에릭 에릭슨, 송재훈 옮김, 『인생의 아홉단계: 나이듦과 삶의 완성』, 서울: 교양인, 2019, p. 22.

4. 일본 사회의 '노년'에 대한 새로운 정의와 시도

주지하다시피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앞서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였고 그에 따라 고령화 및 노년에 대한 접근이나 대책을 다각적으로 실천해 보인 바 있다.²²⁾ 때문에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일찍부터 일본의 노인 복지 사업이나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 등을 분석해 왔고²³⁾, 한국의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데 이를 참고로 삼기도 했다. 보건 복지나 행정적 제도적 차원에서 일본의 사례를 분석하고 한국 사회의 적용 여부를 가늠하는 일도 중요하겠지만,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일본의 행정적 제도적 지원의 밑바탕에는 노년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과 성찰이 전제되어 있다는 점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노년을 문화적 정의로 접근하며 그들의 '변용능력'을 유지하고 확장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개인은 물론이고 사회 전체를 건강하고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매개체가 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미 노년에 관한 인식의 틀을 거듭 재사정해 온 일본의 사례가 노년에 관한 인문학적 고찰을 시도하는 본 논문에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라고 여겨진다. 이하에서는 앞의 두 절에서 살펴보았던 노년의 '변용능력'에 관한 철학적, 역사적 검토가 일본의 경우와 어떻게 접합

22) 197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고령화율 7% 이상)가 되어버린 일본은 1995년에는 고령 사회(aged society, 고령화율 14% 이상)를, 2006년에는 초고령 사회(super-aged society, 고령화율 20%)를 맞이하게 되었다. 한편, 한국은 2000년대에 이르러 고령화 사회를 경험하게 되었고 2018년에 고령 사회에 진입한 뒤, 2025년에는 초고령 사회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3) 최근에 발표된 관련 논문만 간략히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권성철, 「한국과 일본의 장기요양제도의 형성과 전개과정에 관한 비교 고찰」, 『일본문화연구』 제69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9; 조문기, 「고령자의 고용과 봉사 영역 분야에 관한 연구」, 『일본문화연구』 제69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9; 유애정,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 구축과 개호보험제도 개정과정의 정책적 시사점」, 『한국노년학회』 제39집, 한국노년학회, 2019; 이도희, 「한·일 노인복지법의 비교법적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제19집, 한국콘텐츠학회, 2019; 박승현, 「일본 고도경제성장기의 유산과 커뮤니티 케어의 과제」, 『사회과학연구』 제30집,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9; 이진아·한정원, 「일본 지역포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 고찰」,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7집, 한국세계지역학회, 2019; 김수홍·이와타준·유재상, 「한국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과제와 방향성 제시: 일본노인사회보장제도의 변천과정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서」, 『장기요양연구』 제7집, 한국장기요약학회, 2019.

하는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

2018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일본의 고령화율은 28.1%이며, 고령 인구 가운데서도 75세 이상의 노인(1,798만 명, 14.2%)이 65-74세 사이의 노인(1,760만 명, 13.9%)보다 상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65년 되면 2.61명에 한 명은 65세 이상의 노인이, 3.9명 중 한 명은 75세 이상의 노인이 포함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등, 일본의 인구 고령화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²⁴⁾

일본이 처음으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것은 1970년 무렵으로 당시는 고도경제성장이 담보 상태를 보이던 시점이기도 했다. 1973년 오일 쇼크를 계기로 일본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서며 고도경제성장의 시대도 막을 내리는데, 말하자면 이때 일본 사회는 고도경제성장의 종언과 사회적 인 '늙음'을 동시에 맞아들인 셈이 되고 말았다.

경제성장의 둔화와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동시에 가시화되자 공적 복지가 국가 경제를 쇠퇴시킨다는 논의가 자연히 대두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고령 인구에 대한 재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복지 정책이나 사회시스템의 문제 등을 전면적으로 재점검 혹은 수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즉, 1960년대만 하더라도 국민보험과 연금제도, 그리고 노인복지법(1963년 제정)을 활용하여 고령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행정적 보호'가 주된 복지 정책이었지만, 1970년대가 되면서 취업 알선이나 사회 참여 독려, 학습 기회의 확대 등을 실시해 고령자의 의존성을 감소시키는 대신 독립성 내지는 자립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변하게 되었던 것이다.²⁵⁾

이는 앞서서도 언급한 일본 국내외의 경제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변화로서, 공적 자금으로 고령자를 보호하는 것보다 그들의 자립을 도모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행정의 부담 경감과 국가 재무의 건전화로 이어진다는 것을 전제한 대단히 고도화된 고령화 정책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의하고 싶은 대목은 1970년대 이후의 일본에서

24) <https://www8.cao.go.jp/kourei/whitepaper/w-2019/gaiyou/pdf/1s1s.pdf>

(검색일: 2019. 12. 20.)

25) 이미에, 『일본의 고령화와 보람 정책』, 『일본어문학』 제75집, 일본어문학회, 2016, 450쪽.

복지의 대상이자 사회문화적, 경제적 약자인 '고령자(혹은 노인)'의 위상이 '장수'라는 패러다임으로 가치의 전회가 시도된 바가 있었다는 점이다. 그 예로서는 1985년의 '장수사회대책각료회의' 및 이듬해 6월에 발표된 '장수사회대책대강'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고령 및 장수 사회에 대한 대책으로 발표된 대강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것은 크게 고용 및 소득보장시스템, 건강 및 복지 시스템, 학습 및 사회참가시스템, 주택 및 생활환경 시스템, 연구개발 추진, 장수사회대책 추진 등 7개의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노인을 단순히 국가 경제를 압박하는 부정적인 인자로 다루기보다는 건강한 '장수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보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활동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7개의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가동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엿보인다.²⁶⁾ 다시 말해 "장수화시대에 어울리는 사회경제체제로의 전환을 꾀하며" "국민들이 긴 인생을 안심과 보람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사회 전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장수사회' 일본의 목표였던 것이다. 이렇게 1980년대의 일본은 생산력을 잃었을 뿐 아니라 사회적 기여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무기력하고 짐짝 같은 잉여 인간으로서 '노인' 혹은 '고령자'를 위치 지우는 것이 아니라 익숙하지만 새롭고 긍정적인 의미를 유추할 수 있는 '장수'라는 개념을 통해 노인의 재정립을 도모하고 있었다고 지적할 수 있다.

물론 일본에서 장수자가 지속적으로 펼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활동 내역이란 어떠한 것이며 또 그 기대 효과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면에서 드러났는지에 대해 살피는 작업은 또 다른 논의의 장을 필요로 하는 부분일 것이다. 당시의 정책에 대해 이렇게 평가를 유보하는 이유는 1986년에 발표된 '장수사회대책대강'으로부터 불과 3년이 지난 시점인 1989년에 일본 정부가 고령인구 증가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골드플랜을 발표하고 1994년에는 신 골드플랜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으며 2000년에는 노인장기요양을 위한 개호(介護)보험제도를 도입한 사정에서 보듯이, 일본에서는 보편적 사

26) <http://www.ipss.go.jp/publication/j/shiryu/no.13/data/shiryu/souron/15.pdf#search=%271986+%E9%95%B7%E5%A3%BD%E7%A4%BE%E6%9C%83%E5%A4%A7%E7%AD%96%E5%A4%A7%E7%B6%B1%27> (검색일: 2019.12.20.)

회복지제도로써 소위 ‘돌봄의 사회화(socialization of care)’가 여전히 국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이다.²⁷⁾

그러나 여기에서 ‘돌봄의 사회화’를 그저 국가나 지자체가 노인의 복지를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뜻으로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시 말해 돌봄의 체계를 짜임새 있게 구성한다는 것과 돌봄을 극대화시킨다는 것은 전혀 다른 층위의 이야기이다. 각종 플랜이나 제도들이 노인의 건강과 요양을 지원하고 지지하기 위한 행정적 장치라는 점은 틀림없지만, 일본 사회의 지향점이 ‘돌봄의 사회화’를 최소화하려는 데 있다는 것을 분명한 사실이며, 더욱 중요한 사실은 ‘돌봄의 사회화’의 밑바탕에 노년 혹은 나이 들, 늙음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와 이에 따른 인식의 전환이 전제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로서는 2016년 6월 2일에 발표된 ‘일본 1억 인구 총활약 플랜(ニッポン1億総活躍プラン)’이라든지 2018년 2월 16일에 발표된 ‘고령사회대책대강(高齡社会対策大綱)’ 등을 들 수 있다. 전자는 인구 구조 변화로 가속화되고 있는 노동력 부족 해소와 사회보장제도 확충에 초점을 둔 것으로, 그동안 노동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던 여성이나 고령자의 인적 자원을 적극 지원하고 활용하고자 마련된 시책이다. 특히 고령자의 은퇴 연령을 연장하여 그들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것은 노동력 부족 해소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연금 지급 개시 연령도 늦출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 건전화도 크게 기대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정치경제적 효과를 위해 고령자를 기능적, 기술적으로 동원하고 있다고 성급하게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노년까지 유지해 온 변용능력을 유지 혹은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자 시스템이라는 측면을 다분히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후자는 1980년대의 ‘장수사회’ 패러다임의 골자를 이어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대강의 근본적인 취지는 ‘연령에 따른 획일화를 재검토하고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의욕 및 능력을 발휘하여 활

27) 송지연, 「저출산 고령화 시대 아베 정부의 성장 전략」, 『한국과 국제정치』 제35권 제3호 통권 106호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9, 166-167쪽.

약할 수 있는 에이지리스(ageless) 사회'를 실현하는 것에 있다.²⁸⁾ 여기에서 주목할 대목은 '연령에 따른 획일화의 재검토'와 '에이지리스 사회'를 목표로 둔 점일 것이다. 이는 인간의 능력이나 사고, 행동 범위를 연령으로 구분하거나 수렴시키지 않겠다는 함의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고령 및 노년의 문제를 전 세대의 문제로 확대하여 사고함으로써 세대 간의 갈등이나 단절을 유화시켜 사회적 통합을 도모한다는 일면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실 노인의 일차적인 정의는 연령을 통해 이루어지기 마련이고 이로 인해 노인의 생활 반경이나 사회 활동 범위는 크게 제약을 받는다. 이러한 제약과 제제는 이차적으로는 고령자의 자율성이나 개인적 능력과 판단, 그리고 책임을 축소하고 제한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결국 그들을 사회적 약자로 규정하는 데까지 이르고 만다. 이에 반해 현재 일본에서 이루어지고 노년 정책은 산술적인 연령이나 사회적 의미에서 탈피하여 문화적인 의미, 다시 말해 노년이 가지는 변용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지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히 주목할 만하다. 왜냐하면 이는 노년의 삶을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으로 지지하고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벗어나 있을 뿐 아니라 노년의 문제를 보편적인 인간의 성장 과정이자 존재의 자각을 일깨우는 과정으로 접근하며 이들의 자율성과 책임감, 주도성 등을 보장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는 노년이 가지는 '변용능력'의 신장과 제고를 사회적 행정적 시스템으로 지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한 것이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에이지리스 사회' 구현을 의미하는 구체적인 실천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예컨대 지역 사회에서 여러 세대가 함께 공존하는 데 노인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또 리드하고 있는가, 지금까지의 쌓아 온 경험과 지위 등이 고령기를 맞이한 자신에게 어떠한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고 또 앞으로의 인생을 계획하는 데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

28) '고령사회대책대강'에서는 취업과 소득, 건강과 복지, 학습과 사회참여, 생활환경, 국제사회의 공헌 등으로 나누어 구체적인 실천 방안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범주 및 내용은 1986년에 발표된 '장수사회대책대강'과 아주 다르지 않지만, 고령이나 노인에 대한 구분 자체를 재사정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앞선 대강과 크게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는가, 고령기에 들어서서 특별히 도전할 수 있는 과제 혹은 습득할 수 있는 기술이란 어떤 것이 있는가 등의 질문을 노인 스스로 전개하며 그 해답을 찾는 사례들이 공개되고 있다.²⁹⁾ 노인에 대한 이러한 정립은 노인이 복지 예산을 점유해 국가 경제에 압박을 가해 세대 갈등의 유발시키며, 나아가서는 노인에 대한 증오와 적개, 그리고 차별 담론을 생산하는 소위 ‘에이지즘(Ageism)’ 적 사고와는 매우 거리가 멀다.

이처럼 1970년대부터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에서는 전방위적인 고령화 정책들이 시도되어 왔고 그에 따라 노년에 관한 의미나 정의도 변화해 왔다. 특히 일본 사회가 고령 혹은 노년의 문제를 보건복지 정책이나 행정적 대책으로만 일관하지 않고, 이를 보편적인 인간의 성장 과정이자 존재의 자각을 일깨우는 과정으로 보는 관점은 초고령 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는 한국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노년이란 개념이 그저 생물학적 조건으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문화적으로 구성되는 존재라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노년에 대한 새로운 정의와 정립을 위해 그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역할과 행위를 요청하고, 나아가 세대의 분리보다 통합을 지향하는 접근 방식이 보다 시급하게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5. 증가하는 노령층의 참여 확대를 위한 부산시의 정책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로 돌아와 우리나라에서 노령화 지수가 가장 높은 도시로 꼽히는 부산의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2절에서 우리는 노인이 삶

29) <https://www8.cao.go.jp/kourei/kou-kei/h31-ageless.html> (검색일: 2019.12.20.)

<https://www8.cao.go.jp/kourei/index.html> (검색일: 2019.12.20.)

정부 뿐만 아니라 ‘에이지리스 사회’ 구현을 위해 대학에서도 적극적으로 연구에 임하고 있는데, 예컨대 도쿄대학에서는 ‘젊은이와 공존공영하는 지속가능한 건강장수사회를 지향한다(若者と共存共栄する持続可能な健康長寿社会を目指す- Sustainable Life Care, Ageless Society)’는 목표 아래 ‘스스로 지키는 건강사회 거점’을 구축해 의공학과 건강 서비스, 그리고 일상생활 등을 다각적으로 연계시켜 인간이 보다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http://coi.t.u-tokyo.ac.jp/concept/>, 검색일: 2019.12.20)

의 전 과정에서 획득해 온 변용을 가변적인 사회적 맥락에 새로이 편입함으로써 재활성화하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 절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연관의 수립이 어떤 도시 정책으로 구체화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부산은 한국 전쟁 직후 인구가 급성장한 곳이다. 예기치 못하게 급성장한 도시만큼 인구 변동이 매우 심하며 도시 내에도 여러 불균형이 자리하게 되었다. 부산시는 1914년 인구가 2만 명 정도였으나 1942년에 33만 4천 명으로 증가하였고 1945년에는 28만 1천 명 수준이 되었다. 반면 전쟁 직후인 1955년에 100만 5천 명으로 폭증하여, 1963년 직할시로 승격할 당시에는 136만 1천 명 규모였다. 1995년 기장군 편입으로 389만 3천 명으로 정점에 오른 부산시 인구는 2018년 말 기준으로 349만 444명을 기록했다. 이 기간에 전국 인구가 4585만 명에서 5182만 명으로 늘어난 것과는 상반된 현상을 보였다(아주뉴스 2019/11/28)³⁰⁾. 특히 1996년 노인 인구 비율이 4.5%에서 2018년 16.9%로 급증한 반면 20~30대 인구 비율은 38.3%에서 26.7%로 줄어들었다. 부산의 노령화 지수는 한국의 다른 도시에 비해 가장 높고, 평균 가구원 수도 2000년 3.2명에서 2015년 2.5명으로 감소해 소가족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2030년 부산의 노령화 지수는 278.9%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인구 구조가 형성된 원인과 이에 대한 현재의 정책적 대응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부산시의 인구감소는 일단 전출 인구보다 전입 인구가 적은 탓으로 볼 수 있다.³¹⁾ 그 결과 부산의 인구 구조는 전반적으로 방추형의 구조를 보인다. 유소년의 인구비율 및 청장년층의 인구는 줄고 중노년층의 인구는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노인’과 ‘바다’가 부산을 상징하고 있다는 한 시민의 이야기는 이러한 인식을 잘 반영하고 있다. 이런 현상의 원인으로는 부산에 젊은 세대가 정착할 수 있는 산업시설이나 직장이 적고, 울산이나 창원 등 부산 인근의 신흥도시들에 산업시설이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30) 『아주뉴스』, 2019. 11. 28.

31) 부산시, 『2030년 부산도시 기본 계획(변경)』, 2017, 30쪽.



〈그림 1〉 2019년 부산시 시민토론 ON-Air 중에서

그러나 부산이 안고 있는 문제는 단지 중노년층 인구 비중 증가와 유소년 및 청장년층 인구의 감소만은 아니다. 부산에서는 고령자의 비율이 높은 것에 비해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전국통계에 비해 매우 낮다. 한국사회가 고령화 되면서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증가하는 추세이며 부산도 이에 따르고 있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이 비율이 높지 않다. 다른 한편, 부산의 외곽지역인 강서구와 기장군에서는 인구가 급증하지만 중·서·동·영도구의 원도심은 침체가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2019-12-26 17:41:10

부산이 언제부터가 노인 인구만 많다고 해서 “노인과 바다”라는 단어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 모든 게 청년들이 그만큼 일할 곳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일자리가 없으니 젊은 사람들의 수도권으로 이동이 점점 늘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출산율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시 시민토론 ON-Air 시민의견)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에서의 노인주거정책에 따라, 2012년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65세 이상의 노인을 주거 약자로 규정하고(법률 제2조) 공공 건설임대주택의 일정 비율 이상을 주거 약자용 주택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였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에서의 노인주거정책은 상대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높은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하였고, 여기에는 단지 내에서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실버주택을 도입하고 2017년까지 총 1,300호를 공급하는 계획도 포함되었다³²⁾. 이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도시 정책 수립 시 거론되는 연계 프로그램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연계프로그램’이란 “시 당국이 신규로 상업적 시설을 허가해 주는 대가로 개발업자에게 주택, 고용기회, 보육시설, 교통시설 등의 건설을 촉구하는 프로그램”³³⁾, “도심이 성장함에 있어서 역기능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규모 상업지구의 개발업자에게 일정한 고용, 시설, 서비스를 제공케 하거나 혹은 그에 상응하는 부과금의 지불을 요구하는 개발유형”³⁴⁾으로 정의된다. 부산에서도 인구 변화를 고려하여 이런 연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청년층이나 노년층을 겨냥한 도시 개발 정책을 시행하고는 있으나 큰 성과를 보이고 있지는 못하다.

전문가들은 부산 도시 특성을 정확히 알고 권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또한 ‘권역’의 층위 역시 소단위를 고려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도 하다. 부산의 인구 증감은 지역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이 중 중구는 1970년대 10만 명에 2010년대 50% 이상 줄어든 정도로 감소 속도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부산의 인구 변화 특징을 구 별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구 안의 동별로도 편차가 크기 때문에 발전 계획을

32) 장훈, 「1인가구 주거지의 시·공간적 분포변화 특성에 관한 연구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경성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2, 42쪽.

33) Christine L. Andrew and Dwight H. Merriam, “Defensible Linkage”, APA Journal, Vol. 54, No. 2, Chicago: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1988, p. 200(박정관, 「부산시 도시 재개발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24쪽에서 재인용).

34) 박정관, 앞의 논문, 24쪽

세우기 위해서는 동별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 부산시의 경우 시 전체에 걸쳐 인구 노령화 현상이 공간상 점진적·평균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도심축을 중심으로 한 중부산권과 서부산권이 극명하게 양극화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인구노령화 현상이 중부산권에서 동부산권으로 심화·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심각한 인구노령화 양상을 보이는 중부산권에 대한 인구노령화 대책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한다³⁵⁾. 박민성 부산시의원은 “부산에는 한 해 신생아가 10명이 안 되는 동이 있는가 하면 1천 명이 넘는 동도 있는데 부산시 청년 인구·저출산 정책은 이런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며 “세분된 통계 분석을 통해 지역별 맞춤형 정책을 펼쳐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했다³⁶⁾.

부산시의 2030년 부산 도시기본계획은 인구변화를 고려하여 역세권 정비구역 중심으로 1인가구 및 고령자를 위한 거주 단지를 조성하고, 고령자를 위한 복지서비스 및 근린 생활권 등 공급시설 도입을 통해 맞춤형 고령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³⁷⁾. 부산시는 전체적으로 2022년까지 신규 공공임대주택을 7만 3천호 이상 공급하는



〈그림 2〉 고성군 고성읍 교사리에 건립하고 있는 경남도 1호 공공실버주택 조감도 고성군 제공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젊은 계층, 노년층, 산단 근로자를 권역별로 나누어 맞춤형 가구를 공급하는 것을 기조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중부산권에는 대학생이나 신혼부부, 동부산권과 서부산권에는 산단 근로자를 목적으로 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공공실버주택도 이러한 인구 특성을 고려한 사업 중의 하나로 부산시가 적

35) 임영호, 「노인의 정주 환경 인식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6, 50쪽.

36) 『연합뉴스』, 2020. 1. 4.

37) 부산시, 『2030년 부산도시 기본 계획(변경)』, 2017, 146쪽.

극적으로 추진했던 정책 중의 하나이다. 복합단지를 조성하여 노년층이 이용할 만한 시설을 한데 모아 복지와 주거를 동시에 제공한다는 맥락에서 추진되는 사업이다. 사업이 가시화된 경남 고성의 경우를 보면, 100세대를 위하여 지상 13층 규모로 2020년 8월을 목표로 공사를 하고 있으며, 건물의 2~3층에는 실버계층을 위한 물리치료실과 건강관리실을 갖춘 복지관과, 여러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텃밭 등을 제공하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³⁸⁾.

하지만 부산시의 경우에는 공공실버주택(주거+복지관) 사업이 지역 선정 과정부터 많은 잡음을 양성하면서 당초의 야심한 목표와 달리 부침을 겪고 있다. 착수단계인 2016년에는 사상구 학장동의 폐공가를 허물고 지을 예정이었으나 계획이 무산되었고 2017년에는 북구 구포3동의 시유지를 대상으로 복지시설과 주거공간이 복합된 80세대의 주택단지를 만드는 계획으로 진행되었다³⁹⁾. 하지만 이 역시 주민 협의 없이 진행되었다는 반발을 들으면서 주변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결과를 낳았다. 결국 젊은 계층에게는 많은 유인을 주면서 도심에 묶으려 하지만 노인들을 위한 주거 공간은 지역적인 고려 없이 부지를 찾는 데도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인을 위한 임대주택은 인근 주민에게는 피해야 할 이미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런 현상의 근본적 문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인구에 대한 대책이 청년층과 노년층을 별개로 두고 수립된다는 점, 따라서 노인 역시 새로운 문제로 부각되기는 하지만 인구 전체와의 관계를 통해 해결할 방법이 모색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볼 때, 출산 문제와 노인 문제를 구분해서 별개로 다루는 대부분의 정책과 대조적으로, 최근 지자체나 시민단체에서 아이의 육아를 위해 지역의 노인을 활용하는 시도는 적극적으로 주목해 볼 만하다. 2016년 서울시에서 첫 선을 보인 후 전국에 확산 중인 ‘우리동네 아이돌봄 기동대’⁴⁰⁾나 부산 기장군 정관읍의 ‘우리동네 자람터’⁴¹⁾와 같

38) 『부산일보』, 2019. 3. 14.

39) 『국제신문』, 2017. 1. 4.

40) 『서울경제』, 2016. 9. 5.

은 사업이 그것이다. ‘아이돌봄 기동대’란 60세 이상의 노인을 활용하여 ‘노인형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학교 등하교나 학원 및 병원 방문을 동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한편 기장군의 ‘자람터’는 노인복지관을 활용하여 지역의 어르신들이 학습지나 놀이 등을 보조하는 부산시 교육청 지원사업이다. 위와 같은 사업들은 노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단위 권역에서의 사업이며, 노인 문제와 육아 문제를 융합하여 해결하기 위한 시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실버 주택 건설과 같은 노인 대책이 지역의 외면을 받고 있는 최근 세태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시도가 갖는 긍정적인 점은 무엇인가? 그것은 첫째, 노인층을 일방적인 돌봄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그들이 평생 획득해 온 능력을 재활성화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이다. 둘째, 이와 같은 재활성화가 가능해지는 이유는 노인층을 다른 인구층의 문제와 연결시킬 수 있었던 덕분이다. 곧 잉여 인력이 되어 버린 노인층의 문제를 바로 그 동일한 사회적 맥락에서 생겨난 또 다른 문제인 젊은 층의 육아 문제와 다시 접속시킴으로써 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셋째, 이는 이전 대가족 시대 노인의 역할을 핵가족 시대, 나아가 1인 가구 시대의 변화된 맥락에 맞추어 재활성화한 것이기도 하다. 과거 대가족 시대 노인의 역할이 오랜 전통을 거쳐 자생적으로 형성된 질서에 따른 것이라면, 현대 사회에서 이 역할의 부활은 도시 주거 공간 관련 정책을 통해 사회 통합의 방향으로 인구 이동을 유도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업들은 지금까지 우리 논의와 관련지어 볼 때 그 의미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곧 이 사업들은 노인이 생애 과정에서 획득해 온 변용을 변동된 사회 구조 안에 새로이 편입하여 새로운 의미를 띠게 하는 정책, 요컨대 새로운 연관의 창출을 통한 변용의 활성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부산의 사례는 노인이 획득해 온 변용의 활성화를 인구층들 간의 관계 재설정 및 이것과 병행된 도시 공간의 재분할과 연계 정책을 통해 이루어 낼 가능성을 시사한다.

41) 『부산일보』, 2018. 8. 7.

6. '변용능력'을 내포하는 시기로서 노년에 대한 인식전환

노년에 대한 간학문적 교류를 시도해 본 여기에서 연구자들은 '변용능력'을 공통된 문제의식으로 삼았다. 변용능력의 개념을 노년의 시기에 적응해 볼 때 그것은 노년기 이전의 존재 양식에 내포되어 있는 주체적 방식을 유지하면서 그것을 또한 창조적 형태로 발전시킬 수 있는 사유의 가능성을 제공해 준다. 그러한 사유의 방식이 구체적으로 적용된 사례를 러시아의 역사를 통해 제시해 보았다. 사회주의 체제의 러시아에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는 노년층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동시에 노년층이 기여했던 이전의 경험을 사회주의 체제의 신세대에게 전수함으로써 과거와 현재를 연결할 뿐만 아니라 발전적 미래를 위해 노년층의 역할을 중시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었던 것이다. '변용능력'을 중심으로 노년기를 본다면 수동성과 의존성이 강한 시기로 규정하는 일반적 방식에서 벗어나 이전의 경험과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전수하는 시기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일본의 최근 노년 정책에서 이러한 변용능력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경향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 즉 지금까지 노년층에 대한 정책의 주된 방향이었던 '돌봄의 사회화'를 최소화하고 노년층에게 알맞은 사회 참여의 다양한 형태를 개발하여 그들의 주체성, 자발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정책방향은 노년층을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하는 기생집단으로 바라보면서 노동 참여세대와의 갈등을 유발하는 부정적 시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 준다. 노년층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과 행위를 요청하고, 나아가 세대의 분리보다 초월을 지향하는 접근 방식을 우리 사회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노령화 사회에 대한 우려는 또 다른 가능성을 제공하는 희망적 사고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노년층에 대한 지역별 맞춤형 전략을 모색하는 부산시의 최근 정책방향, 노년층과 청년층의 세대 단절이 아닌 상호에게 도움을 주는 정책의 수립 또한 노년층이 가지는 변용능력을 부산에서도 활용하려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노년인구의 증가는 우리 사회도 더 이상 가볍게 볼 수 없는 중대한 현상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해결방식을 출산 장려정책, 노년에 대한 복지정책의 확대와 같이 노년층의 주체적 가능성을 경시하는 정책에서 찾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를 생산할 수도 있다. 노년층이 가지는 주체적 기여의 가능성과 그들의 새로운 생활방식을 가능케 하는 정책의 방향이 이러한 위험성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변용능력의 활용을 강조하는 필자들의 시도는 그러한 가능성을 찾아보기 위한 작은 출발점으로서의 의의를 가지고 있다.

참고문헌

- 권성철, 「한국과 일본의 장기요양제도의 형성과 전개과정에 관한 비교 고찰」, 『일본문화연구』 제69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9.
- 김수홍·이와타준·유재상, 「한국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과제와 방향성 제시: 일본노인사회보장제도의 변천과정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서」, 『장기요양연구』 제7집, 한국장기요약학회, 2019.
- 김정란, 「보부아르의 『조심스러운 나이』에 나타난 노년의 문제」, 『프랑스어문교육』 44, 한국프랑스어문교육학회, 2018.
- 박승현, 「일본 고도경제성장기의 유산과 커뮤니티 케어의 과제」, 『사회과학연구』 제30집,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9.
- 부산시, 『2030년 부산도시 기본 계획(변경)』, 2017.
- 송지연, 「저출산 고령화 시대 아베 정부의 성장 전략」, 『한국과 국제정치』 제35권 제3호 통권 106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9.
- 유애정,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 구축과 개호보험제도 개정과정의 정책적 시사점」, 『한국노년학회』 제39집, 한국노년학회, 2019.
- 에릭 에릭슨, 송재훈 옮김, 『인생의 아홉단계: 나이듦과 삶의 완성』, 서울: 교양인, 2019.
- 이도희, 「한·일 노인복지법의 비교법적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제19집, 한국콘텐츠학회, 2019.
- 이미애, 「일본의 고령화와 보람 정책」, 『일본어문학』 제75집, 일본어문학회, 2016.
- 이미현, 「고령화시대 중장년층의 노후 대비 주거 선호 유형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 이진아·한정원, 「일본 지역포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 케어 (community care) 고찰」,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7집, 한국세계지역학회, 2019.
- 임영호, 「노인의 정주 환경 인식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도시조경학과 박사학위논문, 2005.
- 장훈, 「1인가구 주거지의 시·공간적 분포변화 특성에 관한 연구 - 부산광역시 를 중심으로」, 경성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2.

- 정환수, 「한국사회 노인문제에 대한 철학적 고찰」, 『철학논총』 71(1), 새한철학회, 2013.
- 조문기, 「고령자의 고용과 봉사 영역 분야에 관한 연구」, 『일본문화연구』 제69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9.
- 홍우근, 「부동산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주택수급 효율화 방안-부산시 인구예측을 중심으로」, 동의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Acharkan, V. A. "State Pensions in the USSR,"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Review* 29:3, 1976.
- Cliff, T. *State Capitalism in Russia*, Surrey, 1974.
- Deleuze, Gilles. *Spinoza. Philosophie pratique*, 박기순 옮김, 『스피노자의 철학』, 민음사, 1999.
- Heleniak, Timothy. "Geographic Aspects of Population Aging in the Russian Federation," *Eurasian Geography and Economics* 44:5, 2002.
- Lovell, Stephen. "Soviet Socialism and the Construction of Old Age," *Jahrbücher für Geschichte Osteuropas* 51: 4, 2003.
- Madison, Bernice Q. *Social Welfare in the Soviet Union*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1968.
- Mitchell, Neil J. "Ideology or the Iron Laws of Industrialism: The Case of Pension Policy in Britain and the Soviet Union," *Comparative Politics*, 15: 2, 1983.
- Nussbaum, Martha C. & Saul Levmore, *Aging Thoughtfully Conversations about Retirement, Romance, Wrinkles, and Regre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7.
- Scarre, Geoffrey, (ed.), *The Palgrave Handbook of the Philosophy of Aging*, London: Macmillan Publishers, 2016.
- Simush, P. "Social Changes in the Countryside," *Soviet Review* 19 Summer, 1978.
- Spinoza, Baruch. *L'Ethique*. Bilingue latin-français. ed. & trad. par Bernard Pautrat, Paris: Seuil, 1998.
- И. В. Сталин, "Речь на первом всесоюзном совещании стаховцев

В,” in Robert McNeal ed., *Сталин: Сочинения 14*, Stanford, Calif.: Hoover Institution, 1967.

Simone de Beauvoir, *La vieilles*, 홍상화, 박혜영 옮김, 『노년』, 책세상, 2002.

〈Abstract〉

**Revisiting the Old Age from the Concept
of the Ability to Affect and Be Affected
: A Humanistic Reflection on the Aging City, Busan**

Park, Won-Yong · Cho, Jung-Min ·
Kim, Eun-Ju · Jung, Bub-Mo

The increasing proportion of the aged is not at all surprising in most of advanced countries. The various measures to alleviate the problems resulted from the increase of the old have been suggested, but from the views of authors of the paper, the means to deal with the problem are based on the conception portraying the old as the passive beings required to be taken care of. In order to present the old as the active beings, this paper employs Spinoza's concept of the ability to affect and be affected. The concept of the ability to affect and be affected provides us with the possibilities to view the old as the creative beings who can adapt the jobless and weak positions as the old to the new level. By applying the concept of the ability to affect and be affected to the old, we believe that the old have the possibilities of recovering their status as the beings playing the active roles when they were young, the result of which they can be pictured as the group leading their past experiences to the bright future.

We can find the concrete examples of this picture in the experiences of the Russian history. Some party leaders after launching the socialist system made claims of unequalized state pensions to the old who could not contribute to the immediate tasks of developing the socialist production. But there were also another arguments, according to which the old could convey their valuable experiences to the young and therefore play the role of lessening the generational gap and contributing to the strengthening of the system.

Recently, in the policies dealing with the old in Japan, we can have another employment of the concept of the ability to affect and to be affected. The recent orientation of policies relating to the old in the Japanese society has shown that the proportion of policies of socialization of care on the old is decreasing, whereas the policies aiming at enhancing the subjectivity and spontaneity of the old have become much more valued. This means that the Japanese society has tried to change its perception on the old as the burdensome group to the young generation and establish integrated relationships with society.

In Busan, one of the most rapidly aging city in Korea, we can find attempts to carry out the adequate policies based on the peculiarities of districts. Also the municipal government has tried to implement policies mutually beneficial to the old and the young, which shows the recognition of merits to apply the concept of the ability to affect and be affected.

* Key Words: Ability to Affect and be Affected, the Aged Population,
Humanistic Reflection, Socialization of Care, Busan

· 논문투고일: 2020년 1월 7일 · 심사완료일: 2020년 2월 10일 · 게재결정일: 2020년 2월 10일
